

도시균형 개발을 위한 사하지역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부산은 국토의 관문, 해양수도로서의 기능회복과 미래성장 축으로서의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발전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도시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개발전략 하에 동부산권은 센텀시티 개발, 대규모 도시자연공원, 관광테마파크 등 건강, 매력, 쾌적성이 제공되는 관광거점 개발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다기능 욕구충족을 위한 복합여가 중심지로서의 발전을 이루고, 고용증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서부산지역은 항만, 공단, 고속도로망 등 시정발전 중추 동력원을 보유하고도 비계획적으로 형성된 도시의 노후화, 개발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혐오시설의 집중 등으로, 동부산권 도시매력에 대비되어 지역성장 잠재력이 묻혀지고 차별당해 주민 삶의 의욕마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의 미래성장 전략인 2020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도 서부산권은 친환경보존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자연환경보전, 생태계보전, 특별관리해역,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4개 정부부처 5개 관련법으로 묶여있어 부산 신항만 개발 등 강서일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하구 지역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신평장립공단의 침체와 더불어 강변·다대환경사업소, 신평소각장, 축산폐수 육상저장시설 등 혐오시설의 집적으로 악취와 분진발생 요인이 많아 주민생활불편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지가상승 둔화, 급격한 인구감소 등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구 면적의 24%에 이르는 공업지역은 생활환경 피해와 지역발전 저해요소가 됨은 물론, 구 재정 수입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의 결손을 가져와 구 자체 재정으로 낙동로 등 관내 주간선도로의 보도정비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부산의 균형개발 관점에서 잠재적 자원의 활용 극대화, 지역간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통한 일체감 형성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방치된 지역 차별적 낙후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고, 마땅히 시정의 주체인 부산시에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 대안을 조속히 검토·추진해 주기를 적극 희망하면서

첫째, 환경시설공단 다대사업소 등 혐오시설에 대해 타 지역과 같이 시설개선, 주민 편의공간 확충을 통한 시정 동질성 회복과

둘째, 시의 18.3%에 이르는 영구임대주택 및 기초생활수급자 밀집으로 인한 사회복지비 과다투입에 따른 구 재정부담에 대한 지원책 마련,

셋째, 강변환경사업소 하수연계 처리 절감비(연 70억원)의 사하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환원,

넷째, 더 나아가 공단 입지에 따른 재산세의 상대적 부족분에 대한 재원조정 교부금 보충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일동은, 부산시가 균형개발 가치를 중시하여 낙후된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주민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37만 구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2월 9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일동